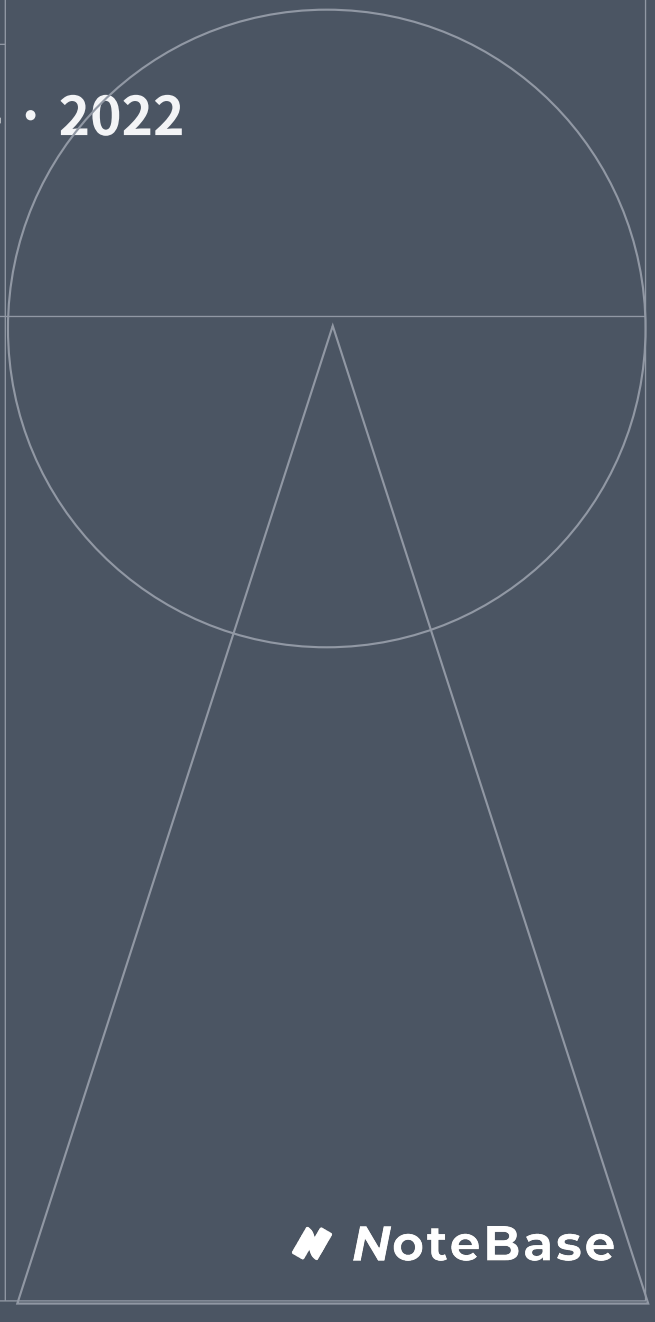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노무사 · 경제학원론 · 2022



NoteBas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노무사 · 경제학원론 · 2022

전문직/노무사 · 경제학원론 · 2022

문 101.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두 재화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X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X재와 대체 관계에 있는 Y재의 (ㄱ)곡선은 (ㄴ)으로 이동하고, 그 결과 Y재의 균형가격은 (ㄷ)한다.

① ㄱ: 수요, ㄴ: 우측, ㄷ: 상승

② ㄱ: 수요, ㄴ: 좌측, ㄷ: 상승

③ ㄱ: 수요, ㄴ: 좌측, ㄷ: 하락

④ ㄱ: 공급, ㄴ: 우측, ㄷ: 상승

⑤ ㄱ: 공급, ㄴ: 좌측, ㄷ: 하락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대체재 한 재화의 가격 상승이 다른 재화의 수요곡선과 균형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체재는 서로 대신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이다. X재와 Y재가 대체 관계일 때 X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Y재를 더 찾으므로 Y재의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 증가는 수요곡선 자체를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Y재의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므로 수요곡선의 우측 이동은 Y재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을 모두 상승시킨다.

선지별 해설

① O — X재의 가격 상승은 대체재인 Y재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Y재의 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고 균형가격은 상승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ㄴ: 좌측'이다. 올바르게는 Y재의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ㄷ: 상승'은 맞다.
③ X — 'ㄴ: 좌측, ㄷ: 하락'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Y재의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균형가격은 상승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ㄱ: 공급'이다. X재의 가격 변화는 Y재의 공급조건이 아니라 Y재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변화시키므로 올바르게는 'ㄱ: 수요'이다.
⑤ X — 'ㄱ: 공급, ㄴ: 좌측, ㄷ: 하락'이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ㄱ: 수요, ㄴ: 우측, ㄷ: 상승'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X재의 가격 상승을 X재의 수요량 변화와 혼동하거나, 그 영향을 Y재의 공급 변화로 보는 것이 함정이다. 이 문항은 X재 시장의 곡선 이동을 묻는 것이 아니라 X재 가격 변화가 대체재인 Y재의 수요에 미치는 교차효과를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두 재화가 대체재인지 보완재인지 확인한다. 대체재이면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며, 우상향 공급곡선 아래에서는 균형가격이 상승한다.

암기 포인트

대체재는 교차관계가 양(+)이다. X재 가격 상승 → Y재 수요 증가 → Y재 수요곡선 우측 이동 → Y재 균형가격 상승이다.

NoteBase

문 102. 다음 생산함수에서 규모에 대한 수확이 체증, 불변, 체감의 순으로 짝지은 것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 K는 자본이다.)

ㄱ. $q = 2L + 3K$
ㄴ. $q = (2L + K)^{1/2}$
ㄷ. $q = 2L \cdot K$
ㄹ. $q = L^{1/3}K^{2/3}$
ㅁ. $q = 3L^{1/2} + 3K$

① ㄱ - ㄴ - ㄷ
② ㄴ - ㄹ - ㅁ
③ ㄷ - ㄱ - ㄴ
④ ㄷ - ㄴ - ㅁ
⑤ ㅁ - ㄹ - ㄱ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같은 비율로 늘렸을 때 생산량이 그 비율보다 더 크게, 같게, 더 작게 증가하는지를 판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모든 생산요소를 $t > 1$배 했을 때 $f(tL, tK)$와 $tf(L, K)$를 비교한다.
$f(tL, tK) > tf(L, K)$이면 규모수익체증, 같으면 규모수익불변, 작으면 규모수익체감이다.

사용할 공식

생산함수가 k차 동차함수이면
$f(tL, tK) = t^k f(L, K)$
이다. 따라서 $k > 1$이면 체증, $k = 1$이면 불변, $k < 1$이면 체감이다. 동차함수가 아니면 두 식을 직접 비교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ㄱ: $f(tL, tK) = 2tL + 3tK = tf(L, K)$이므로 불변이다.
ㄴ: $f(tL, tK) = (2tL + tK)^{1/2} = t^{1/2} f(L, K)$이므로 체감이다.
ㄷ: $f(tL, tK) = 2(tL)(tK) = t^2 f(L, K)$이므로 체증이다.
ㄹ: 지수의 합이 $1/3 + 2/3 = 1$이므로 불변이다.
ㅁ: $f(tL, tK) = 3t^{1/2}L^{1/2} + 3tK < t(3L^{1/2} + 3K) = tf(L, K)$이므로 체감이다.
따라서 체증은 ㄷ, 불변은 ㄱ·ㄹ, 체감은 ㄴ·ㅁ이다.

선지 판단

① X — ㄱ은 체증이 아니라 1차 동차인 규모수익불변이고, ㄷ은 체감이 아니라 2차 동차인 규모수익체증이다. 올바른 분류는 ㄱ-불변, ㄴ-체감, ㄷ-체증이다.
② X — ㄴ은 체증이 아니라 동차차수가 1/2인 규모수익체감이다. ㄹ-불변과 ㅁ-체감은 맞지만, 체증 자리는 ㄷ이어야 한다.
③ O — ㄷ은 체증, ㄱ은 불변, ㄴ은 체감이므로 제시된 순서와 일치한다.
④ X — ㄴ은 불변이 아니라 동차차수가 1/2인 규모수익체감이다. 따라서 가운데의 ㄴ은 ㄱ 또는 ㄹ로 고쳐야 한다.
⑤ X — ㅁ은 체증이 아니라 규모수익체감이고, ㄱ은 체감이 아니라 규모수익불변이다. 체증-불변-체감의 올바른 배열은 ㄷ-(ㄱ 또는 ㄹ)-(ㄴ 또는 ㅁ)이다.

오답 포인트

개별 생산요소의 지수나 계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t배 해야 한다. 특히 ㅁ은 항마다 차수가 달라 동차함수가 아니므로 지수를 단순히 더하지 않고 $f(tL, tK)$와 $tf(L, K)$를 직접 비교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모든 생산요소에 동시에 t를 곱한다. 동차함수이면 전체 동차차수를 1과 비교하고, 항별 차수가 달라 동차함수가 아니면 $f(tL, tK)$와 $tf(L, K)$의 대소를 직접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모든 요소를 동시에 확대한다. 동차차수는 1보다 크면 체증, 1이면 불변, 1보다 작으면 체감이다.

NoteBase

문 103. 독점기업의 가격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비자잉여를 유지하며 생산자의 이윤을 극대화한다.

② 독점가격은 한계비용과 같다.

③ 가격차별을 하는 경우 단일 가격을 설정하는 것에 비해 사회적 후생은 증가한다.

④ 가격차별을 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더 높은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

⑤ 이부가격제는 소비자들의 수요 행태가 다양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독점기업의 단일가격 설정, 가격차별, 이부가격제가 소비자잉여·이윤·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일가격 독점은 모든 소비자에게 같은 가격을 부과하고 $MR = MC$인 생산량을 선택하므로 일반적으로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고 사중손실이 발생한다.
가격차별은 동일한 재화에 대해 비용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서로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전략이다. 단일가격 아래에서 거래되지 않던 수요까지 충족하여 생산량이 늘어나면 사중손실이 줄고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
이부가격제는 가입비와 사용량당 가격을 함께 부과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들의 수요가 비슷할수록 하나의 가입비로 소비자잉여를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소비자잉여를 유지하며'이다. 완전가격차별에서는 각 소비자의 최대 지불의사만큼 가격을 받아 소비자잉여를 생산자이윤으로 이전하므로, 올바르게는 소비자잉여가 감소하거나 완전히 소진된다.
② X — 틀린 표현은 '독점가격은 한계비용과 같다'이다. 단일가격 독점기업은 $MR = MC$에서 생산량을 정하고 수요곡선에서 가격을 정하므로, 일반적으로 독점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다.
③ O — 가격차별로 지불의사가 서로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면 단일가격 독점에서 거래되지 않던 수요까지 충족되어 생산량이 늘고 사중손실이 감소하므로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가격탄력성이 더 높은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이다. 가격차별 독점기업은 가격탄력성이 낮아 가격 인상에 덜 민감한 집단에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가격탄력성이 높은 집단에는 더 낮은 가격을 부과한다.
⑤ X — 틀린 표현은 '수요 행태가 다양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동일한 이부가격제를 적용할 때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비슷할수록 공통 가입비로 소비자잉여를 많이 회수할 수 있으므로, 올바르게는 수요 행태가 유사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가격차별이 이윤을 높인다는 사실을 소비자잉여의 유지와 혼동하기 쉽다. 또한 가격탄력성이 큰 집단은 가격에 더 민감하므로 높은 가격이 아니라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 전략 문항에서는 먼저 생산량 변화, 소비자잉여의 이전, 집단별 가격탄력성의 세 축을 확인한다. 가격차별로 생산량이 늘면 사중손실이 줄고, 가격탄력성이 낮은 집단일수록 더 높은 가격이 적용된다. 이부가격제는 소비자 수요가 유사할수록 공통 가입비 설정이 유리하다.

암기 포인트

독점은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고, 가격차별은 저탄력 집단에 고가격을 부과하며, 이부가격제는 수요가 유사할수록 효과적이다.

NoteBase

문 104. 경쟁시장에서 A기업의 단기 총비용함수는 $C(q) = 50 + 10q + 2q^2$이고, 한계비용함수는 $\mathrm{MC}(q) = 10 + 4q$이다. 시장가격이 $P = 30$일 때, A기업의 생산량(q)과 생산자잉여(PS)는?

① $q = 4, \mathrm{PS} = 0$

② $q = 4, \mathrm{PS} = 5$

③ $q = 5, \mathrm{PS} = 0$

④ $q = 5, \mathrm{PS} = 50$

⑤ $q = 15, \mathrm{PS} = 5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인 가격과 한계비용의 일치로 생산량을 구하고, 총수입에서 가변비용을 빼 생산자잉여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C(q) = 50 + 10q + 2q^2$, $\mathrm{MC}(q) = 10 + 4q$, $P = 30$이다.
구해야 할 값: 이윤극대화 생산량 q와 생산자잉여 PS이다.
주의할 조건: 총비용의 고정비용 50은 생산자잉여 계산에서 빼지 않는다. 생산자잉여는 총수입에서 가변비용을 뺀 값이다.

사용할 공식

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P = \mathrm{MC}(q)$이다.
생산자잉여는 $\mathrm{PS} = Pq - VC(q)$이고, 이 문항의 가변비용은 $VC(q) = 10q + 2q^2$이다.
경쟁기업은 시장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므로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생산량을 선택한다. 또한 생산자잉여는 수입에서 생산에 따라 변하는 비용만 차감한 값이므로 고정비용을 제외한다.

계산 과정

1. 생산량은 $30 = 10 + 4q$에서 구하므로 $4q = 20$, 따라서 $q = 5$이다.
2. 총수입은 $Pq = 30 \times 5 = 150$이다.
3. 가변비용은 $VC(5) = 10 \times 5 + 2 \times 5^2 = 50 + 50 = 100$이다.
4. 생산자잉여는 $\mathrm{PS} = 150 - 100 = 5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q = 4$와 PS = 0이 모두 틀렸다. 가격과 한계비용을 같게 하면 $q = 5$이고 생산자잉여는 50이다. 올바르게는 "$q = 5$, PS = 50"이다.
② X — $q = 4$와 PS = 5가 모두 틀렸다.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5이며 생산자잉여는 50이다. 올바르게는 "$q = 5$, PS = 50"이다.
③ X — $q = 5$는 맞지만 "PS = 0"이 틀렸다. 총수입 150에서 가변비용 100을 빼면 생산자잉여는 50이다. 올바르게는 "$q = 5$, PS = 50"이다.
④ O — P = MC에서 $q = 5$이고, $Pq - VC(q) = 150 - 100 = 50$이므로 두 값이 모두 맞다.
⑤ X — "$q = 15$"가 틀렸다. $q = 15$에서는 한계비용이 MC(15) = 70으로 가격 30보다 크므로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될 수 없다. 올바르게는 "$q = 5$, PS = 50"이다.

오답 포인트

생산량을 구할 때 가격 30과 한계비용 $10 + 4q$를 같게 두어야 한다. 또한 생산자잉여와 이윤을 혼동하기 쉽다. 생산자잉여는 총수입에서 가변비용만 차감한 50이고, 이윤은 여기에서 고정비용 50까지 차감한 0이다. ③은 이윤 0을 생산자잉여로 잘못 제시한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쟁기업 문제에서는 먼저 P = MC로 생산량을 구한 뒤, 비용함수에서 고정비용을 분리하고 PS = $Pq - VC(q)$로 생산자잉여를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경쟁기업은 $P = MC$, 생산자잉여는 총수입-가변비용, 이윤은 생산자잉여-고정비용이다.

NoteBase

문 105. 동일한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두 기업 A와 B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은 두 기업이 전략을 동시에 선택할 경우 얻게 되는 보수행렬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전략을 동시에 선택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본 게임은 1회만 행해진다. 괄호 안의 왼쪽 값은 A의 보수, 오른쪽 값은 B의 보수를 나타낸다.)

		B	
		광고함	광고 안함
A	광고함	(6, 4)	(8, 3)
	광고 안함	(3, 8)	(10, 4)

① 내쉬균형의 보수조합은 (6, 4)이다.

② A의 우월전략은 광고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③ B의 우월전략은 광고 안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④ A와 B가 각각 우월전략을 선택할 때 내쉬균형에 도달한다.

⑤ 내쉬균형은 파레토 효율적(Pareto efficient)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보수행렬에서 상대방의 각 전략에 대한 최적반응을 비교하여 우월전략과 내쉬균형을 찾고, 그 균형의 파레토 효율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각 칸에서 왼쪽 값은 A의 보수, 오른쪽 값은 B의 보수임을 확인한다.
2. B의 전략을 하나씩 고정하여 A의 두 보수를 비교하고, A의 전략을 하나씩 고정하여 B의 두 보수를 비교한다.
3. 두 기업의 최적반응이 만나는 칸을 내쉬균형으로 찾은 뒤, 다른 칸이 두 기업의 보수를 모두 낮추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 기업의 보수를 높이는지 확인한다.

핵심 근거

B가 광고하면 A는 광고함의 보수 6이 광고 안함의 보수 3보다 크므로 광고함이 최적반응이다. B가 광고하지 않으면 A는 광고 안함의 보수 10이 광고함의 보수 8보다 크므로 광고 안함이 최적반응이다. 따라서 A에게는 우월전략이 없다.

A가 광고하면 B는 광고함의 보수 4가 광고 안함의 보수 3보다 크고, A가 광고하지 않아도 B는 광고함의 보수 8이 광고 안함의 보수 4보다 크다. 따라서 B의 우월전략은 광고함이다.

서로의 최적반응이 만나는 전략조합은 (A 광고함, B 광고함)이고, 그 보수조합은 (6, 4)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A가 광고함, B가 광고함을 선택한 칸은 서로의 최적반응이 만나는 내쉬균형이며 보수조합은 (6, 4)이다.
② X — B가 광고할 때 A는 광고함을 선택하지만, B가 광고하지 않을 때에는 광고 안함을 선택한다. 틀린 표현은 'A의 우월전략은 광고함'이며, 올바르게는 'A에게는 우월전략이 없다'이다.
③ X — A가 광고할 때 B의 보수는 광고함 4, 광고 안함 3이고, A가 광고하지 않을 때에는 광고함 8, 광고 안함 4이다. 틀린 표현은 'B의 우월전략은 광고 안함'이며, 올바르게는 'B의 우월전략은 광고함'이다.
④ X — B에게는 광고함이라는 우월전략이 있지만 A에게는 우월전략이 없다. 틀린 표현은 'A와 B가 각각 우월전략을 선택'한다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B가 우월전략인 광고함을 선택하고 A가 이에 대한 최적반응인 광고함을 선택할 때 내쉬균형에 도달한다'이다.
⑤ X — 내쉬균형의 보수 (6, 4)는 (A 광고 안함, B 광고 안함)의 보수 (10, 4)와 비교하면 A의 보수는 높아지고 B의 보수는 낮아지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내쉬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이 내쉬균형은 (10, 4)에 의해 파레토 지배되므로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다'이다.

오답 포인트

내쉬균형을 두 기업이 모두 우월전략을 선택한 결과로 오해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B만 우월전략을 가지며, A는 B의 선택에 따라 최적반응이 달라진다. 또한 내쉬균형은 일방적 이탈의 유인이 없는 상태일 뿐이므로 반드시 파레토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상대방의 전략을 고정한 채 자신의 보수를 비교하여 각자의 최적반응을 표시한다. 모든 상대 전략에 대해 같은 전략이 최적이면 우월전략이고, 두 최적반응이 교차하는 칸이 내쉬균형이다. 파레토 효율성은 내쉬균형과 별도로 다른 칸의 보수조합과 비교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우월전략은 상대의 선택과 무관하게 최선이고, 내쉬균형은 최적반응의 교차점이며, 내쉬균형이 곧 파레토 효율을 뜻하지는 않는다.

NoteBase

문 106. 정부는 물가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X재에 부과하는 물품세를 단위당 100원만큼 인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소비자의 부담은 100원만큼 줄어든다.

② 조세 인하 혜택의 일정 부분은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③ 조세 인하로 인해 X재 가격은 하락하지만, 소비량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조세 인하로 인해 후생손실이 늘어난다.

⑤ X재에 부과되는 물품세는 중립세여서 경제주체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물품세 인하의 혜택이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어떻게 귀착되는지, 그리고 거래량과 후생손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세 귀착은 세금을 법적으로 누가 내는지가 아니라 세금 때문에 생긴 실질적 부담을 소비자와 생산자가 어떻게 나누는지를 뜻한다.
물품세를 단위당 100원 인하하면 소비자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순가격 사이의 조세 격차가 100원 줄어든다.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므로 소비자가격은 하락하고 생산자의 순수취가격은 상승하며 거래량은 증가한다. 따라서 감세 혜택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나뉘어 귀착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소비자가격은 하락하지만 그 하락 폭이 세금 인하액 100원 전부와 같지는 않다. 틀린 표현은 "100원만큼"이다. 올바르게는 소비자 부담은 100원보다 적게 줄고, 나머지 감세 혜택은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② O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므로 세금 인하 뒤 생산자가 받는 순가격이 상승한다. 따라서 감세 혜택의 일정 부분은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③ X
조세 인하로 소비자가격이 하락하면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고, 새로운 균형에서 거래량도 증가한다. 틀린 표현은 "소비량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이다. 올바르게는 X재의 소비량은 증가한다.

④ X
물품세 인하는 세금으로 벌어진 수요자 지불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의 격차를 줄이고 거래량을 늘리므로 조세로 인한 후생손실을 감소시킨다. 틀린 표현은 "후생손실이 늘어난다"이다. 올바르게는 후생손실이 줄어든다.

⑤ X
물품세는 특정 재화의 거래에 부과되어 소비자가격, 생산자의 순수취가격, 거래량을 변화시키므로 중립세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중립세여서 경제주체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이다. 올바르게는 물품세가 소비자와 생산자의 부담 및 자원배분에 영향을 준다.

오답 포인트

①은 세금을 100원 인하하면 소비자가격도 반드시 100원 하락한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세금 인하액은 소비자가격 하락분과 생산자 순수취가격 상승분으로 나뉘며, 어느 쪽이 더 많이 얻는지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위세가 인하되면 먼저 조세 격차가 줄어드는지 확인한다. 수요가 우하향하고 공급이 우상향하면 소비자가격 하락, 생산자 순수취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후생손실 감소의 순서로 판단한다. 감세 혜택의 분배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결정된다.

암기 포인트

단위세 인하의 혜택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나누고, 거래량은 늘며 후생손실은 줄어든다.

NoteBase

문 107.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X재에 탄소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X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ㄱ. 탄소세는 외부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이다.
ㄴ. 탄소세를 부과하면 X재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ㄷ. 탄소세를 부과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ㄹ. X재의 주요사례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들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탄소 배출이 만드는 외부불경제를 탄소세로 내부화할 때 X재의 가격, 생산량, 자원배분 효율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부불경제는 생산이나 소비가 제3자에게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그 비용이 시장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다.
탄소세는 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여 사적 비용에 외부비용을 반영하는 피구세이다. 적정한 탄소세가 부과되면 공급자의 비용이 증가하여 공급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하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상승하며 거래량과 탄소 배출은 감소한다. 그 결과 과잉생산이 줄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과 ㄴ은 모두 옳지만, 탄소세가 외부비용을 내부화하여 과잉생산을 줄이므로 ㄷ도 옳다. 빠진 표현은 'ㄷ'이며,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② X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옳은 ㄱ과 ㄷ이 빠져 있다.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X재의 주요 사례가 아니다. 'ㄴ, ㄹ'은 'ㄱ, ㄴ, ㄷ'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옳은 ㄱ과 ㄴ이 빠져 있다. X재의 주요 사례로는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탄소를 배출하는 재화나 화력발전을 들 수 있다. 'ㄷ, ㄹ'은 'ㄱ, ㄴ, ㄷ'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ㄱ은 탄소세가 외부불경제를 교정하는 조세라는 점에서 옳다. ㄴ은 세금 부과로 공급자의 비용이 증가하여 X재의 소비자가격이 상승한다는 점에서 옳다. ㄷ은 외부비용의 내부화로 과잉생산이 줄어 자원배분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옳다.

⑤ X
ㄴ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옳은 ㄱ이 빠져 있다.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이 아니라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기반 재화나 화력발전이 X재의 대표적 사례이다. 'ㄴ, ㄷ, ㄹ'은 'ㄱ, ㄴ, ㄷ'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탄소세가 생산자에게 부과되더라도 공급비용 증가로 소비자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또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에너지 생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탄소 배출 재화의 대표 사례로 보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에 단위당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비용 증가 → 공급 감소 → 소비자가격 상승·거래량 감소 → 외부비용 내부화와 효율성 개선'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탄소세는 외부비용을 가격에 넣는 피구세이다. 가격은 오르고 과잉생산과 탄소 배출은 줄어든다.

NoteBase

문 108. 소득분배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접근할수록 지니계수는 커진다.

②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작을수록 분배상태가 더 평등한 것으로 본다.

③ 로렌츠곡선은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비율을 각각 축으로 하여 계층별 소득분포를 표시한 곡선을 말한다.

④ 십분위분배율이란 최하위 4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을 말한다.

⑤ 십분위분배율은 0과 2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더욱 평등한 분배상태를 의미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십분위분배율이 소득분배의 평등도를 어떤 방향으로 나타내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로렌츠곡선: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비율을 연결해 소득분포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완전평등선인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평등하다.
지니계수: 완전평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을 이용한 불평등 지표이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십분위분배율: 최하위 4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값이 클수록 평등하다.

선지별 해설

① X —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접근하면 두 선 사이의 면적이 줄어 지니계수는 작아진다. 틀린 표현은 '지니계수는 커진다'이며, 올바르게는 '지니계수는 작아진다'이다.
② O —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작을수록 완전평등에 가까운 분배상태를 뜻한다.
③ O — 로렌츠곡선은 가로축에 인구의 누적비율, 세로축에 소득의 누적비율을 두어 계층별 소득분포를 표시한다.
④ O — 십분위분배율의 분자는 최하위 40%의 소득점유율이고 분모는 최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이다.
⑤ O — 십분위분배율은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지며, 하위계층의 상대적 소득점유율이 높아져 그 값이 클수록 분배가 더 평등함을 뜻한다.

오답 포인트

지니계수와 십분위분배율의 방향을 반대로 기억하기 쉽다. ①의 '대각선에 접근할수록 지니계수는 커진다'가 함정이다. 대각선에 가까워지면 평등도가 높아지므로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는 작아진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지표가 불평등을 재는지 평등을 재는지 구분한다. 지니계수는 작을수록 평등하고, 십분위분배율은 클수록 평등하다.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므로 지니계수와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암기 포인트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 지니계수는 작을수록 평등, 십분위분배율은 클수록 평등이다.

NoteBase

문 109. 1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민들이 안전을 우려하여 공동으로 아파트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한다. 설치된 CCTV의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CCTV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공유자원이다.
ㄴ. CCTV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사적재이다.
ㄷ. CCTV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비배제성을 갖는다.
ㄹ. CCTV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공공재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ㄷ, ㄹ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누리는 CCTV 서비스가 경합성과 배제성에 따라 어떤 재화로 분류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공재: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함께 갖는 재화이다.
공유자원: 경합성은 있지만 비배제성을 갖는 재화이다.
사적재: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갖는 재화이다.
이 문항의 CCTV 서비스는 한 주민이 안전 혜택을 누려도 다른 주민의 혜택이 줄지 않고, 특정 주민만 그 혜택에서 제외하기도 어려우므로 주민들에게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틀리다. 공유자원은 비배제적이지만 경합적인 재화인데, CCTV의 안전 서비스는 한 주민이 이용해도 다른 주민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가 감소하지 않는다. '공유자원'은 '공공재'로 고쳐야 한다.
② X — ㄴ은 틀리다. 사적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가져야 하지만, 공동 설치된 CCTV의 안전 혜택은 주민들 사이에서 비경합적이고 특정 주민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사적재'는 '공공재'로 고쳐야 한다.
③ X — ㄱ과 ㄴ이 모두 틀리다. CCTV 서비스는 공유자원도 사적재도 아니며, 주민들에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공공재이다. 따라서 'ㄱ, ㄴ'은 'ㄷ, ㄹ'로 고쳐야 한다.
④ X — ㄷ은 맞지만 ㄴ은 틀리다. 주민 한 명만 CCTV의 안전 혜택에서 제외하기 어려우므로 비배제성은 성립하지만, 경합성과 배제성을 갖는 사적재는 아니다. 따라서 'ㄴ, ㄷ'은 'ㄷ, ㄹ'로 고쳐야 한다.
⑤ O — ㄷ과 ㄹ이 모두 맞다. 주민들을 CCTV의 안전 혜택에서 개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고 한 주민의 혜택이 다른 주민의 혜택을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주민들에게 비배제적이며 공공재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화라는 이유만으로 ㄱ의 '공유자원'을 고르면 안 된다. 공유자원과 공공재는 모두 비배제적이지만, 공유자원은 경합적이고 공공재는 비경합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량을 줄이는지로 경합성을 판단하고,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혜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로 배제성을 판단한다. 비경합적이면서 비배제적이면 공공재로 분류한다.

암기 포인트

공공재는 비경합·비배제, 공유자원은 경합·비배제, 사적재는 경합·배제이다.

NoteBase

문 110.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농촌지역의 물가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는 적합하지 않다.

②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정부 물가관리의 주요 대상지표가 된다.

③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상품의 가격동향을 반영하지 못한다.

④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국내총생산을 실질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한다.

⑤ 우리나라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기업 간에 거래되는 일정 비율 이상의 비중을 갖는 원자재 및 자본재의 가격 변화를 반영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의 조사 범위와 산출 방식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가계가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운데 대표 품목의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생산자물가지수(PPI)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시장에 출하하는 대표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종합적인 가격 수준을 나타내며, 명목 GDP와 실질 GDP의 비율로 산출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의 가격조사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농촌지역 자체의 물가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② X — 틀린 표현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전부가 아니라 소비지출 비중과 대표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대표 품목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올바르게는 '가계가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운데 대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며, 대표적인 물가관리 지표로 활용된다'이다.
③ O — GDP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므로 수입품 가격은 GDP 디플레이터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수입 원재료 가격이 국내 생산물 가격에 전가되면 그 영향이 간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④ O —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실질 GDP× 100으로 산출한다. 기준연도의 지수는 100이 된다.
⑤ O —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시장에 출하되는 대표 품목을 거래 비중과 대표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소비재뿐 아니라 생산과정에 쓰이는 원재료·중간재와 자본재의 가격 변화도 반영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함정은 소비자물가지수의 명칭 때문에 소비자가 사는 모든 품목을 조사한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데 있다. 실제 지수는 대표 품목으로 구성된 표본 지수이다. 또한 ③에서는 수입품이 GDP 디플레이터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과 수입가격이 국내 생산물 가격을 통해 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사 대상을 먼저 확인한다. CPI는 가계 소비의 대표 품목, PPI는 국내 생산자의 국내 출하품,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이다. 선지에 '모든'과 같은 전칭 표현이 있으면 실제 조사 품목이 표본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CPI는 소비자의 대표 장바구니, PPI는 국내 생산자의 국내 출하가격,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 생산 전체의 가격 수준이다.

NoteBase

문 111. A국과 B국이 자동차 1대와 옷 1벌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의 양이 아래 표와 같다고 한다. 리카도의 비교 우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 분	A국	B국
자동차	10	6
옷	5	2

① A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② B국은 옷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③ B국의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은 옷 2벌이다.

④ B국은 옷 생산에 있어 A국에 비해 절대 우위에 있다.

⑤ A국은 자동차 생산에 특화하고, B국은 옷 생산에 특화하여 교역을 하는 것이 상호 이익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재화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으로 각 재화의 기회비용을 계산하고, 기회비용이 더 낮은 국가의 비교 우위를 판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A국은 자동차 1대에 노동 10, 옷 1벌에 노동 5가 필요하다.
B국은 자동차 1대에 노동 6, 옷 1벌에 노동 2가 필요하다.
노동 투입량이 작을수록 절대 우위가 있고, 다른 재화를 포기하는 양인 기회비용이 작을수록 비교 우위가 있다.

사용할 공식

자동차 1대의 기회비용은 (자동차 1대의 노동량)/(옷 1벌의 노동량)만큼의 옷이다.
옷 1벌의 기회비용은 (옷 1벌의 노동량)/(자동차 1대의 노동량)만큼의 자동차이다.
동일한 노동으로 한 재화를 생산하면 다른 재화의 생산을 포기해야 하므로 이 비율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A국: 자동차 1대의 기회비용은 $\frac{10}{5}$ = 2벌의 옷이고, 옷 1벌의 기회비용은 $\frac{5}{10}$ = $\frac{1}{2}$대의 자동차이다.
B국: 자동차 1대의 기회비용은 $\frac{6}{2}$ = 3벌의 옷이고, 옷 1벌의 기회비용은 $\frac{2}{6}$ = $\frac{1}{3}$대의 자동차이다.
자동차는 기회비용이 2벌로 더 작은 A국, 옷은 기회비용이 $\frac{1}{3}$대로 더 작은 B국이 비교 우위를 가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A국의 자동차 1대 기회비용은 옷 2벌로, B국의 옷 3벌보다 작다. 따라서 A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② O — B국의 옷 1벌 기회비용은 자동차 $\frac{1}{3}$대로, A국의 $\frac{1}{2}$대보다 작다. 따라서 B국은 옷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③ X — 틀린 표현은 ‘B국의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은 옷 2벌’이다. B국에서 자동차 1대에는 노동 6이 필요하고 옷 1벌에는 노동 2가 필요하므로, 올바르게는 자동차 1대의 기회비용이 옷 $\frac{6}{2}=3$벌이다.
④ O — 옷 1벌에 필요한 노동량은 B국이 2, A국이 5이다. B국이 더 적은 노동으로 옷을 생산하므로 옷 생산에서 절대 우위가 있다.
⑤ O — A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자동차에, B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옷에 특화한다. 자동차 1대당 옷 2벌과 3벌 사이의 교환비율에서 교역하면 양국 모두 자급할 때보다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의 옷 2벌은 A국의 자동차 1대 기회비용이다. B국의 자동차 노동량 6을 A국의 옷 노동량 5와 섞지 않고, 같은 국가 안에서 자동차 노동량을 옷 노동량으로 나누어야 한다. 또한 절대 우위는 노동량의 크기,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의 크기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국가 안에서 두 재화의 노동량 비율로 기회비용을 계산한다. 그다음 재화별로 기회비용이 더 작은 국가를 찾아 비교 우위를 배정하고, 단순 노동량이 더 작은 국가는 절대 우위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절대 우위는 ‘더 적은 투입’, 비교 우위는 ‘더 낮은 기회비용’이다. 자동차의 기회비용은 자동차 노동량을 옷 노동량으로 나눈 값이다.

NoteBase

문 112. 2020년의 명목GDP는 2,000조원, 2021년의 명목GDP는 2,200조원이고,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GDP 디플레이터는 2021년에 105였다. 2021년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약 얼마인가?

① 1.2 %

② 2.4 %

③ 4.8 %

④ 9.6 %

⑤ 14.4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GDP 디플레이터로 명목GDP를 실질GDP로 환산한 뒤 기준연도 대비 실질GDP 증가율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2020년 명목GDP 2,000조원, 2021년 명목GDP 2,200조원, 2021년 GDP 디플레이터 105이다.
구해야 할 값: 2020년 대비 2021년의 실질경제성장률이다.
주의할 조건: 2020년이 기준연도이므로 2020년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고, 2020년 실질GDP는 2,000조원이다.

사용할 공식

실질GDP=명목GDPGDP 디플레이터/100
실질경제성장률=당해 연도 실질GDP-전년 실질GDP전년 실질GDP× 100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GDP에 포함된 물가 변동을 제거하는 지수이므로 먼저 2021년 명목GDP를 2020년 가격 기준의 실질GDP로 환산해야 한다.

계산 과정

1. 2021년 실질GDP를 계산한다.
2,200105/100=2,2001.05≈ 2,095.24조원
2. 2020년 실질GDP 2,000조원을 기준으로 증가율을 계산한다.
$\frac{2,095.24 - 2,000}{2,000} \times 100 \approx 4.7619\%$
3. 선지의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면 약 4.8%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1.2%는 계산값 4.8%의 약 4분의 1로, 실질경제성장률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약 4.8%이다.
② X — 2.4%는 계산값 4.8%의 약 절반으로, 실질경제성장률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약 4.8%이다.
③ O — GDP 디플레이터로 환산한 2021년 실질GDP를 이용하면 실질경제성장률은 약 4.8%이다.
④ X — 9.6%는 계산값 4.8%의 약 2배로, 실질경제성장률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약 4.8%이다.
⑤ X — 14.4%는 계산값 4.8%의 약 3배로, 실질경제성장률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약 4.8%이다.

오답 포인트

명목GDP 증가율은 10%이지만 물가가 5% 상승했으므로 이를 그대로 실질경제성장률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10%에서 5%를 단순히 빼면 5%가 되지만, 정확한 계산은 명목GDP를 1.05로 나눈 뒤 실질GDP 증가율을 구하는 것이므로 약 4.8%가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준연도의 실질GDP를 확인하고, 비교연도의 명목GDP를 GDP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실질GDP로 환산한 다음, 두 실질GDP 사이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명목GDP를 디플레이터로 나누면 실질GDP가 되고, 경제성장률은 실질GDP의 증가율이다.

NoteBase

문 113. 장기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이민자의 증가로 노동인구 증가

② 물적 및 인적 자본의 증대

③ 기술진보로 인한 생산성 증대

④ 새로운 광물자원의 발견

⑤ 자연실업률의 상승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장기 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실물적 생산능력의 변화와 그 이동 방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장기 총공급은 경제가 노동·자본·자원·기술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때 생산할 수 있는 잠재산출량을 나타낸다. 노동량, 자본량, 천연자원 또는 생산성이 증가하면 잠재산출량이 늘어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반대로 자연실업률이 상승하면 자연고용량과 잠재산출량이 감소하므로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이민자의 증가로 노동인구가 늘면 생산요소인 노동의 공급이 증가하여 잠재산출량이 커지므로 장기 총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오른쪽 이동 요인이 아닌 것'으로 분류한 것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오른쪽 이동 요인이다.

② X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이 증대하면 생산능력과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잠재산출량이 증가하므로 장기 총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정답 선지로 고른 것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오른쪽 이동 요인이다.

③ X
기술진보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같은 생산요소로 더 많은 산출을 생산할 수 있어 잠재산출량이 증가하므로 장기 총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정답 선지로 고른 것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오른쪽 이동 요인이다.

④ X
새로운 광물자원의 발견은 이용 가능한 천연자원을 늘려 경제의 생산능력과 잠재산출량을 증가시키므로 장기 총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정답 선지로 고른 것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오른쪽 이동 요인이다.

⑤ O
자연실업률이 상승하면 완전고용 상태에서의 고용량이 줄어 잠재산출량이 감소하므로 장기 총공급곡선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오른쪽 이동 요인이 아닌 선지이다.

오답 포인트

⑤의 '자연실업률 상승'을 단순히 노동시장 변화로만 보고 노동인구 증가와 같은 방향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노동인구의 증가는 생산 가능한 노동의 양을 늘리는 반면, 자연실업률의 상승은 주어진 노동인구 중 자연고용되는 비율을 낮춰 잠재산출량을 감소시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요인이 노동·자본·자원·기술을 통해 잠재산출량을 늘리는지 줄이는지 판단한다. 잠재산출량이 늘면 장기 총공급곡선은 오른쪽, 줄면 왼쪽으로 이동한다.

암기 포인트

노동·자본·자원·기술의 증가는 오른쪽, 자연실업률의 상승은 왼쪽이다.

NoteBase

문 114. 인플레이션 비용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메뉴비용

② 누진소득세제하의 조세부담 증가

③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자원배분 왜곡

④ 자산 가치 평가 기준의 안정화

⑤ 구두창비용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실제 자원 낭비와 경제적 의사결정의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플레이션 비용은 물가 상승 때문에 가격을 바꾸거나 현금 보유를 줄이는 데 드는 자원, 조세 부담의 왜곡, 상대가격의 교란처럼 사회가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이다.
대표적인 비용에는 메뉴비용, 구두창비용, 누진세제에서의 조세 왜곡, 상대가격 왜곡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메뉴비용은 기업이 인플레이션에 맞추어 가격표·메뉴·전산 가격 등을 자주 변경하면서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인플레이션 비용에 해당한다.
② O —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면 실질소득이 크게 늘지 않아도 더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들어갈 수 있어 실질 조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인플레이션 비용에 해당한다.
③ O — 기업마다 가격을 조정하는 시점이 달라 상대가격이 실제 수급 상황과 다르게 변할 수 있고, 이는 소비와 생산의 신호를 흐려 자원배분을 왜곡하므로 인플레이션 비용에 해당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자산 가치 평가 기준의 안정화'이다.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가치척도 기능을 약화하고 미래 물가와 명목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므로, 올바르게는 '자산 가치 평가 기준의 불안정화'라고 해야 한다. 안정화는 인플레이션 비용이 아니다.
⑤ O — 구두창비용은 화폐가치 하락을 피하려고 현금 보유를 줄이고 금융기관 방문이나 자금 이체를 더 자주 하면서 발생하는 시간과 거래 비용이므로 인플레이션 비용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④의 '안정화'를 인플레이션의 긍정적 효과처럼 무심코 넘기는 것이 함정이다. 인플레이션은 가치 평가의 기준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든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가 물가 상승 때문에 추가 자원이 낭비되거나 세금·가격신호·가치척도가 왜곡되는 현상인지 확인한다. ‘안정화’, ‘불확실성 감소’처럼 인플레이션의 일반적 효과와 반대되는 표현은 비용에서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인플레이션 비용은 메뉴·구두창·조세 왜곡·상대가격 왜곡이며, 가치 평가 기준은 안정화가 아니라 불안정화된다.

NoteBase

문 115. 통화량 증가의 요인이 아닌 것은?

① 본원통화량 증가

②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

③ 통화승수 증가

④ 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 감소

⑤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상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통화량은 본원통화와 통화승수의 곱으로 결정되므로, 각 요인이 본원통화 또는 통화승수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본원통화가 증가하거나 통화승수가 커지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지급준비율과 초과지급준비율은 통화승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사용할 공식

$M = mB$

M은 통화량, m은 통화승수, B는 본원통화이다. 통화승수는 현금보유비율을 c, 법정지급준비율을 r, 초과지급준비율을 e라 할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 = \frac{1+c}{c+r+e}$

따라서 B 또는 m이 증가하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r 또는 e가 낮아지면 통화승수가 증가한다.

판단 과정

각 선지가 본원통화 B를 늘리는지, 통화승수 m을 늘리는지 차례로 확인한다. 재할인율 인상은 은행의 중앙은행 차입을 위축시키므로 본원통화와 통화량을 늘리는 요인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본원통화량이 증가하면 $M = mB$에서 B가 커지므로 통화량이 증가한다.
② O —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인하되면 대출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고 통화승수가 커지므로 통화량이 증가한다.
③ O — 본원통화가 같아도 통화승수 m이 증가하면 $M = mB$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한다.
④ O — 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이 감소하면 예금 중 대출로 이어지는 비중이 커져 통화승수와 통화량이 증가한다.
⑤ X —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상은 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 비용을 높여 차입과 본원통화 공급을 위축시키므로 통화량 증가 요인이 아니다. 틀린 표현인 '재할인율 인상'을 '재할인율 인하'로 고치면 통화량 증가 요인이 된다.

오답 포인트

⑤의 '재할인율 인상'을 긴축이 아니라 완화로 거꾸로 판단하기 쉽다. 지급준비율 인하는 은행의 대출 여력을 늘리지만, 재할인율 인상은 중앙은행 차입 비용을 높이므로 통화량에 미치는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M = mB$로 나누어 본원통화 요인과 통화승수 요인을 구분한다. 본원통화 증가, 지급준비율 하락, 초과지급준비율 하락은 통화량을 늘리고, 재할인율 인상은 통화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암기 포인트

본원통화·통화승수는 통화량과 같은 방향이고, 지급준비율·초과지급준비율·재할인율은 통화량과 반대 방향이다.

NoteBase

문 116. 국민소득계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총생산은 국내총생산과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의 합계이다.

② 명목국내총생산은 생산량의 변화와 함께 가격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

③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 용도의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총합이다.

④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에서 일정기간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총합이다.

⑤ 투자는 민간투자와 정부투자의 합계이며, 재고변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국민소득계정의 주요 생산지표와 지출 항목의 정의를 구별하고, 투자에 재고변동이 포함된다는 점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내총생산(GDP)은 일정 기간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이며, 각 생산단계에서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과도 같다.
국민총생산(GNP)은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로, GNP=GDP+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의 관계가 성립한다.
명목GDP는 해당 연도의 가격으로 평가하므로 생산량과 가격의 변화가 모두 반영된다.
국민소득계정의 투자는 고정자본 형성뿐 아니라 재고의 증가 또는 감소인 재고변동도 포함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국민총생산은 국내에서 생산된 소득에 자국민이 국외에서 받은 요소소득을 더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받은 요소소득을 뺀 값이다. 따라서 국내총생산과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의 합이다.
② O — 명목국내총생산은 당해 연도의 가격으로 생산량을 평가하므로 생산량이 변해도 달라지고 가격이 변해도 달라진다.
③ O — 국내총생산은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용도의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한 유량 지표이다. 중간재를 별도로 더하지 않는 것은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④ O — 각 생산단계의 부가가치는 그 단계의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액을 뺀 값이다. 이 부가가치를 모두 합하면 최종생산물의 가치, 즉 국내총생산과 일치한다.
⑤ X — 틀린 표현은 '재고변동은 포함하지 않는다'이다. 실제로 국민소득계정의 투자는 민간·정부의 고정투자와 재고변동을 포함하므로, 재고가 늘면 투자에 더하고 재고가 줄면 투자에서 뺀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일상에서 투자를 설비·건물 구입만으로 생각하면 ⑤의 '재고변동은 포함하지 않는다'를 맞는 말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생산되었지만 아직 판매되지 않은 재화도 그 기간의 생산물이며, 국민소득계정에서는 재고투자로 처리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GDP 관련 선지는 '국내에서', '일정 기간', '최종 재화와 서비스', '시장가치'라는 정의 요소를 확인한다. 투자 관련 선지는 고정투자뿐 아니라 재고변동의 포함 여부까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명목GDP는 수량과 가격의 영향을 모두 받고, 국민소득계정의 투자는 고정투자와 재고변동을 모두 포함한다.

NoteBase

문 117. 다음은 A국의 경제를 나타낸다. 완전고용의 GDP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지출은? (단, Y는 GDP, C는 민간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Y_f는 완전고용하에서 GDP이다.)

○ $Y = C + I + G$
○ $I = 300$
○ $T = 100$
○ $C = 100 + 0.5(Y - T)$
○ $G = 100$
○ $Y_f = 1{,}200$

① 100
② 150
③ 300
④ 350
⑤ 4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정부지출승수를 이용해 완전고용 GDP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정부지출 증가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한계소비성향은 0.5, 현재 정부지출은 100, 완전고용 GDP는 1,200이다.
구해야 할 값: 현재 균형 GDP와 완전고용 GDP의 차이를 없애는 정부지출 증가액 ΔG이다.
주의할 조건: 선지의 150은 정부지출의 최종 수준이 아니라 추가로 늘려야 하는 금액이다.

사용할 공식

정부지출승수는
k_G=11-한계소비성향
이고, 정부지출 변화에 따른 GDP 변화는
$\Delta Y = k_G \Delta G$
이다.
정부지출은 총수요를 직접 늘리고, 늘어난 소득의 일부가 다시 소비되므로 승수효과가 발생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현재 균형 GDP를 구한다.
$Y = 100 + 0.5(Y - 100) + 300 + 100$
$Y = 450 + 0.5Y$
따라서 $Y = 900$이다.
2. 완전고용 GDP까지의 갭은 $1{,}200 - 900 = 300$이다.
3. 정부지출승수는 $k_G = 1/(1 - 0.5) = 2$이다.
4. $300 = 2\Delta G$이므로 $\Delta G = 150$이다.
5. 정부지출의 최종 수준은 $100 + 150 = 250$이다. 실제로 $Y = 650 + 300 + 250 = 1{,}200$이므로 완전고용 GDP와 일치한다.

선지 판단

① X — 100만 늘리면 GDP는 승수효과로 200 증가하여 1,100이 되므로 100의 갭이 남는다. 또한 100은 문제에 주어진 현재 정부지출 수준이다. 올바르게는 정부지출 증가액이 150, 최종 정부지출 수준이 250이다.
② O — 정부지출승수가 2이므로 GDP 갭 300을 메우려면 정부지출을 150 늘려야 한다.
③ X — 300은 GDP 갭 자체이며 정부지출 증가액이 아니다. 300을 늘리면 GDP가 600 증가하여 1,500이 된다. 올바르게는 GDP 갭 300을 승수 2로 나눈 150만 늘린다.
④ X — 350을 늘리면 GDP가 700 증가하여 1,600이 되므로 완전고용 GDP를 초과한다. 올바르게는 정부지출 증가액이 150이다.
⑤ X — 400을 늘리면 GDP가 800 증가하여 1,700이 되므로 완전고용 GDP를 초과한다. 올바르게는 정부지출 증가액이 150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큰 함정은 GDP 갭 300을 정부지출 증가액으로 그대로 고르는 것이다. 정부지출승수가 2이므로 정부지출은 갭의 절반인 150만 늘리면 된다. 또한 증가액 150과 최종 정부지출 수준 250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현재 균형 GDP를 구하고, 완전고용 GDP와의 갭을 계산한 뒤, 그 갭을 정부지출승수로 나누어 필요한 정부지출 증가액을 구한다. 마지막으로 문제와 선지가 증가액을 묻는지 최종 수준을 묻는지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정부지출 증가액은 산출갭을 정부지출승수로 나눈 값이다: $\Delta G = \Delta Y / k_G$.

NoteBase

문 118. 1년간 정기예금의 실질이자율이 5%, 인플레이션율이 3%이고, 이자소득세율이 20%일 때 세후 명목이자율은?

① 1.6%

② 4.8%

③ 5.0%

④ 6.4%

⑤ 8.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실질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로 세전 명목이자율을 구한 뒤, 이자소득세를 차감하여 세후 명목이자율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실질이자율 5%, 인플레이션율 3%, 이자소득세율 20%
구해야 할 값: 세후 명목이자율
주의할 조건: 세율은 실질이자율이 아니라 명목이자율에 적용한다.

사용할 공식

명목이자율의 근사식은 $i \approx r + \pi$이다.
세후 명목이자율은 $i_{after} = i(1 - t)$이다.
실질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이 주어졌으므로 먼저 명목이자율을 구하고, 이자소득세율만큼 차감해야 하므로 이 두 공식을 차례로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세전 명목이자율을 구한다.
$i \approx 5\% + 3\% = 8\%$
2. 세후에는 명목이자의 80%를 받는다.
$i_{after} = 8\% \times (1 - 0.20) = 8\% \times 0.8 = 6.4\%$
따라서 세후 명목이자율은 6.4%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1.6%는 8%에 세율 20%를 곱한 세금 부분이다. 세후 명목이자율로 고치면 6.4%이다.
② X — 4.8%는 8% × 0.8의 계산 결과가 아니다. 세후 명목이자율로 고치면 6.4%이다.
③ X — 5.0%는 문제에서 주어진 실질이자율이다. 세후 명목이자율로 고치면 6.4%이다.
④ O — 세전 명목이자율 8%에서 세율 20%를 차감하면 8% × 0.8 = 6.4%이다.
⑤ X — 8.0%는 세금을 차감하기 전의 명목이자율이다. 세후 명목이자율로 고치면 6.4%이다.

오답 포인트

⑤의 8.0%를 바로 고르면 세전과 세후를 혼동한 것이다. ①의 1.6%는 세후 이자율이 아니라 세금으로 빠지는 비율이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은 세금 20%를 뺀 나머지 80%인 6.4%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질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을 더해 세전 명목이자율을 구한 다음, 세후 값을 묻는 경우 1-세율을 곱한다.

암기 포인트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의 합으로 근사하고, 세후 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 1-세율을 곱한다.

NoteBase

문 119. 다음 표는 A국의 노동시장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4,000명으로 일정할 때 2020년 대비 2021년의 노동시장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년	2021년
취업자 수	1,100명	1,000명
비경제활동인구	2,000명	2,100명

① 경제활동참가율 감소

② 실업률 증가

③ 고용률 감소

④ 실업자 수 변화없음

⑤ 취업률 변화없음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생산가능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뺀 경제활동인구를 구한 뒤, 취업자와 실업자의 수 및 각 비율의 분모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생산가능인구는 두 해 모두 4,000명이다.
2020년: 취업자 1,100명, 비경제활동인구 2,000명이다.
2021년: 취업자 1,000명, 비경제활동인구 2,100명이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분모는 생산가능인구이고, 실업률과 취업률의 분모는 경제활동인구이다.

사용할 공식

P: 생산가능인구, N: 비경제활동인구, L: 경제활동인구, E: 취업자 수, U: 실업자 수라고 한다.
$L = P - N, \quad U = L - E$
경제활동참가율=(L)/(P)×100\%, 실업률=(U)/(L)×100\%
고용률=(E)/(P)×100\%, 취업률=(E)/(L)×100\%
각 지표는 노동시장 상태를 서로 다른 분모로 측정하므로 해당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2020년 경제활동인구는 $4,000-2,000=2,000$명이고, 실업자는 $2,000-1,100=900$명이다.
2021년 경제활동인구는 $4,000-2,100=1,900$명이고, 실업자는 $1,900-1,000=900$명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50%에서 47.5%로 감소한다.
실업률은 45%에서 약 47.4%로 증가한다.
고용률은 27.5%에서 25%로 감소한다.
취업률은 55%에서 약 52.6%로 감소한다.

선지 판단

① O — 경제활동참가율은 50%에서 47.5%로 감소한다.
② O — 실업자 수는 같지만 경제활동인구가 2,000명에서 1,900명으로 줄어 실업률은 45%에서 약 47.4%로 증가한다.
③ O — 고용률은 27.5%에서 25%로 감소한다.
④ O — 실업자 수는 두 해 모두 900명이므로 변화가 없다.
⑤ X — '취업률 변화없음'이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취업률이 55%에서 약 52.6%로 감소한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④를 함께 판단할 때 수와 비율을 혼동하기 쉽다. 실업자 수는 900명으로 같지만 실업률의 분모인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므로 실업률은 증가한다. 또한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를, 취업률은 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사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수를 구하고, 각 지표의 분모가 생산가능인구인지 경제활동인구인지 확인한 뒤 두 시점의 값을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참가율·고용률의 분모는 생산가능인구, 실업률·취업률의 분모는 경제활동인구이다. 사람 수가 같아도 분모가 달라지면 비율은 달라진다.

NoteBase

문 120.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일 때, A기업의 생산함수는 $Q = -4L^2 + 100L$이고 생산물가격은 50이다. 임금이 1,000에서 3,000으로 상승할 때 노동수요량의 변화는? (단, Q는 산출량, L은 노동시간이다.)

① 변화없음
② 5 감소
③ 5 증가
④ 10 감소
⑤ 10 증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완전경쟁기업의 노동수요 조건인 가치한계생산과 임금의 일치, 즉 $P \times MPL = w$를 이용하여 임금 상승 전후의 노동수요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생산함수는 $Q = -4L^2 + 100L$이고 생산물가격은 50이다.
임금은 1,000에서 3,000으로 상승한다.
구해야 할 값은 임금 상승 전후의 이윤극대화 노동시간 차이이다.

사용할 공식

노동의 한계생산은 생산함수를 노동시간으로 미분하여 구한다.
$MPL = \frac{dQ}{dL} = -8L + 100$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이면 기업은 노동의 가치한계생산이 임금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노동을 고용한다.
$P \times MPL = w$
따라서 이 기업의 노동수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50(-8L + 100) = w$

NoteBase

계산 과정

1. 임금이 1,000일 때
$50(-8L + 100) = 1{,}000$
$-400L + 5{,}000 = 1{,}000$
따라서 $L = 10$이다.

2. 임금이 3,000일 때
$50(-8L + 100) = 3{,}000$
$-400L + 5{,}000 = 3{,}000$
따라서 $L = 5$이다.

3. 노동수요량의 변화
$5 - 10 = -5$
따라서 노동수요량은 5만큼 감소한다.

선지 판단

① X — 노동수요는 $L = 10$에서 $L = 5$로 변하므로 '변화없음'은 틀리다. 올바르게는 '5 감소'이다.
② O — 계산 결과 노동수요가 10에서 5로 줄어 5 감소한다.
③ X — '5 증가'는 변화 방향이 반대이다. 올바르게는 '5 감소'이다.
④ X — '10 감소'는 감소량을 잘못 계산한 것이다. 올바르게는 초기 노동수요 10과 최종 노동수요 5의 차이인 '5 감소'이다.
⑤ X — '10 증가'는 감소량과 방향을 모두 잘못 판단한 것이다. 올바르게는 '5 감소'이다.

오답 포인트

임금 자체의 증가분 2,000을 노동수요 변화로 착각하거나, 임금 상승 전 노동수요 10을 그대로 감소량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 두 임금에서 노동수요를 각각 구한 뒤 최종값에서 초기값을 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경쟁 노동수요 문제는 생산함수를 미분하여 MPL을 구하고, $P \times MPL = w$에 임금의 이전 값과 새로운 값을 각각 대입한 뒤 두 노동수요량의 차이를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완전경쟁기업의 노동수요는 $VMPL = P \times MPL = w$이며, 임금이 상승하면 한계생산이 체감하는 구간의 노동수요는 감소한다.

NoteBase

문 121. 노동시장과 임금격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상적 임금격차(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 이론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가 위험 선호자이기 때문에 고위험 직종의 임금이 높게 형성된다.

② 동등보수(equal pay)의 원칙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함을 의미한다.

③ 유보임금률(reservation wage rate)은 동일 업무에 대해서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이중노동시장 이론에 따르면,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 간의 이동 여부는 정부규제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

⑤ 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의 임금격차는 한계생산물 가치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노동시장의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보상적 임금격차, 동등보수, 유보임금률, 이중노동시장, 한계생산물 가치의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보상적 임금격차: 위험·불편 등 바람직하지 않은 직무 특성을 감수하도록 근로자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기는 임금 차이이다.
동등보수: 동일한 노동 또는 동일가치의 노동에는 성별 등과 무관하게 동등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원칙이다.
유보임금률: 근로자가 일자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요구하는 최소 임금 수준으로, 개인의 선호·비근로소득·구직여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중노동시장: 고임금·고용안정의 1차노동시장과 저임금·고용불안의 2차노동시장이 분절되어 있고 두 시장 사이의 이동에 구조적 장벽이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한계생산물 가치: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고용할 때 늘어나는 생산물의 시장가치이며,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와 임금 결정의 기초가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모든 근로자가 위험 선호자이기 때문에'이다. 보상적 임금격차는 근로자가 위험이나 불편을 기피하므로 이를 감수하게 하려면 임금 프리미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② X
틀린 표현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이다. 동등보수의 원칙은 단순히 직종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라, 동일한 노동 또는 동일가치의 노동에 동등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뜻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이다. 유보임금률은 각 노동자가 일자리를 수락하는 최소 임금이므로 개인의 선호, 비근로소득, 실업급여, 구직 여건 등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

④ X
틀린 표현은 '정부규제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이다. 이중노동시장 이론은 두 시장 사이의 이동이 기업 내부의 승진·채용 관행, 숙련 및 경력 기회의 차이, 차별 등 구조적·제도적 장벽에 의해 제한된다고 본다. 정부규제를 이동 여부의 가장 큰 결정요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⑤ O
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은 생산성, 즉 한계생산물 가치가 다를 수 있다. 노동에 대한 수요와 임금은 한계생산물 가치의 영향을 받으므로 그 차이는 두 노동집단의 임금격차를 만드는 요인이 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위험한 직무의 고임금이라는 결론은 비슷하지만 그 원인을 '위험 선호'로 뒤집었다. ②는 '동일·동일가치 노동'을 '유사한 직종'으로 넓혔고, ③은 개인별 최저 수락 임금을 획일적인 값으로 바꾸었다. ④는 노동시장 분절의 구조적 장벽을 정부규제 하나로 과도하게 단정한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위험·불편에는 보상 임금, 일자리 수락의 최소 기준에는 개인별 유보임금, 1차·2차 시장 사이에는 구조적 이동 장벽, 노동수요와 임금에는 한계생산물 가치가 대응하는지 확인한다. '모든', '동일하게', '가장 큰'과 같은 단정 표현은 개념의 전제와 일치하는지 따져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위험은 보상, 유보임금은 개인별, 이중시장은 분절, 임금은 한계생산물 가치의 영향을 받는다.

NoteBase

문 122. 노동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의 임금 탄력성을 작게 하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동과 다른 생산요소 간의 대체탄력성이 커진다.
ㄴ.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노동비용 비중이 커진다.
ㄷ. 노동투입으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신규 특허 적용에 따라 상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아진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탄력성을 크게 하는지 작게 하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임금이 변할 때 기업의 노동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나타낸다.
노동과 다른 생산요소 사이의 대체탄력성이 작을수록, 총비용에서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수록, 생산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도 작아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의 '대체탄력성이 커진다'는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을 작게 하는 요인이 아니다. 다른 생산요소로 노동을 쉽게 대체할 수 있을수록 임금 상승 때 노동수요를 더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노동수요는 더 탄력적이 된다. 올바르게는 노동과 다른 생산요소 간의 대체탄력성이 작아져야 한다.

② X
ㄴ의 '노동비용 비중이 커진다'는 방향이 반대이다. 노동비용의 비중이 클수록 임금 변화가 총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노동수요가 더 민감하게 변한다. 올바르게는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노동비용 비중이 작아져야 한다.

③ O
ㄷ처럼 생산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지면 상품 가격 변화에 따른 판매량 변화가 작다. 따라서 임금 변화가 생산비와 상품 가격을 거쳐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작아져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작아진다.

④ X
ㄷ은 맞지만 ㄱ은 틀리므로 'ㄱ, ㄷ'이라는 조합이 잘못되었다. 올바른 조합은 ㄷ만 포함한 것이다.

⑤ X
ㄷ은 맞지만 ㄴ은 틀리므로 'ㄴ, ㄷ'이라는 조합이 잘못되었다. 올바른 조합은 ㄷ만 포함한 것이다.

오답 포인트

ㄱ과 ㄴ은 모두 '커진다'라는 표현 때문에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을 작게 하는 요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체가능성과 노동비용 비중이 커지면 기업이 임금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탄력성은 오히려 커진다. ㄷ만 탄력성을 작게 하는 방향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임금 변화에 기업이 노동량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지와 임금 변화가 비용·상품수요에 얼마나 크게 전달되는지를 판단한다. 생산요소 간 대체가 어렵고, 노동비용 비중이 작고, 생산물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작다.

암기 포인트

대체탄력성·노동비용 비중·생산물 수요탄력성이 작으면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도 작다.

NoteBase

문 123.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와 전용수입(transfer earning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노동에 대한 사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은 전용수입에 해당한다.

② 노동공급곡선이 수평이면 지급한 보수 전액이 경제적 지대이다.

③ 노동을 현재의 고용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수는 전용수입에 해당한다.

④ 경제적 지대의 비중이 높은 노동은 다른 요소로 대체하기가 더욱 수월하다.

⑤ 경제적 지대의 비중이 높은 노동의 경우 임금률이 상승할 때 노동 공급량이 쉽게 증가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경제적 지대와 전용수입을 구분하고, 노동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총보수가 두 부분으로 어떻게 나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전용수입은 노동을 현재의 용도에 계속 공급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최소 보수로서 다른 용도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이다.
경제적 지대는 실제 보수 중 전용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총보수는 전용수입과 경제적 지대의 합이다.
노동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총보수 전액이 경제적 지대이고, 노동공급이 완전탄력적이면 총보수 전액이 전용수입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공급이 고정된 노동은 보수가 줄어도 공급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현재 용도에 붙잡아 두기 위한 최소 보수인 전용수입이 0이다. 틀린 표현은 '전용수입'이며, 올바르게는 지급액 전부가 경제적 지대이다.

② X
수평인 노동공급곡선은 일정한 임금보다 낮으면 노동이 전혀 공급되지 않는 완전탄력적 공급을 뜻한다. 틀린 표현은 '보수 전액이 경제적 지대'이며, 올바르게는 보수 전액이 전용수입이고 경제적 지대는 0이다.

③ O
노동을 현재의 고용상태에 계속 머물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 보수가 바로 전용수입의 정의이다. 실제 지급액이 이 최소 보수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경제적 지대가 된다.

④ X
경제적 지대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이고 해당 노동이 희소하여 대체가 어렵다는 뜻이다. 틀린 표현은 '다른 요소로 대체하기가 더욱 수월하다'이며, 올바르게는 다른 요소로 대체하기가 어렵다.

⑤ X
경제적 지대의 비중이 높은 노동은 공급이 비탄력적이므로 임금률이 상승해도 노동 공급량이 크게 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쉽게 증가한다'이며, 올바르게는 쉽게 증가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공급이 고정되면 최소한 지급해야 할 금액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급자가 다른 용도로 이동하지 않으므로 전용수입은 0이고 지급액 전부가 경제적 지대이다. 반대로 수평 공급에서는 일정한 보수 전액을 지급해야 공급이 유지되므로 전액이 전용수입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전용수입을 '현재 용도에 남게 하는 최소 보수'로 잡고, 실제 보수에서 이를 뺀 나머지를 경제적 지대로 판단한다. 이어 공급곡선이 수직이면 전액 지대, 수평이면 전액 전용수입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총보수 = 전용수입 + 경제적 지대, 수직 공급 = 전액 지대, 수평 공급 = 전액 전용수입이다.

NoteBase

문 124.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직단념자의 증가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초래하여 실업률을 상승시킨다.

②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실제 임금수준이 균형임금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COVID-19 팬데믹 문제로 산업 활동이 둔화하여 발생하는 실업은 마찰적 실업에 해당한다.

④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산 증대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경우 구조적 실업에 해당한다.

⑤ 해외 유아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는 경우 실업률이 하락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실업률의 분모가 경제활동인구라는 점과 마찰적·구조적·경기적 실업의 발생 원인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비율이며,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다.
마찰적 실업은 구직·이직 과정의 일시적 탐색 때문에, 구조적 실업은 산업구조나 기술 변화로 노동수요와 노동자의 기술이 맞지 않아, 경기적 실업은 경기 침체로 총수요와 생산이 감소하여 발생한다.
비자발적 실업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로, 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경직될 때 발생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실업률을 상승'이다. 구직을 포기한 사람은 실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므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한다. 실업자와 경제활동인구가 함께 감소하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실업률은 하락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균형임금보다 낮다'이다. 실제 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게 유지되면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를 초과하여 일하고 싶어도 취업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③ X — 틀린 표현은 '마찰적 실업'이다. 팬데믹으로 산업 활동과 총수요가 둔화하여 발생한 실업은 경기 위축에 따른 경기적 실업에 해당한다.
④ O — 친환경차 확대로 자동차 산업의 생산구조와 필요한 기술이 변하면서 기존 내연기관 부문의 노동수요가 감소한 경우이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무 불일치이므로 구조적 실업에 해당한다.
⑤ X — 틀린 표현은 '실업률이 하락한다'이다. 유아는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이므로, 해외 유아의 국내 유입만으로 실업자 수나 경제활동인구가 변하지 않는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실업률은 변하지 않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인구 집단 사이의 이동 방향을 반대로 제시하고, ③은 경기 침체로 생긴 실업을 단순한 구직 과정의 실업과 혼동하게 한다. ⑤는 실업률의 분모를 전체 인구로 착각하게 하는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해당 사람이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판정한 뒤 실업률의 분자와 분모 변화를 확인한다. 실업 유형은 '탐색 과정이면 마찰적, 산업·기술 변화와 직무 불일치이면 구조적, 경기 침체이면 경기적'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구직 포기는 비경제활동인구, 산업 변화는 구조적 실업, 경기 침체는 경기적 실업이다.

NoteBase

문 125. 효율임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효율임금이 노동시장의 균형임금과 동일하여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서로 다른 기업의 노동자 임금수준이 지속적으로 다른 경우는 효율임금이론으로 설명된다.

③ 효율임금이론은 노동자의 이동이 단기적으로 활발하여 균형임금이 효율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를 가정한다.

④ 효율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효과로 인하여 노동의 태만이 증가한다.

⑤ 효율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만 남는 역선택 문제가 야기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효율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는 이유와 그 결과인 생산성 향상, 임금 격차, 비자발적 실업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효율임금은 기업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높은 임금은 직장을 잃을 때의 손실을 크게 하여 태만을 줄이고, 이직률을 낮추며, 우수한 노동자의 지원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임금이 시장청산 수준보다 높으므로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를 초과하여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균형임금과 동일하여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다'이다. 효율임금은 일반적으로 균형임금보다 높으며, 그 결과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보다 많아져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② O
기업마다 노동자의 태만 방지, 이직 억제,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선택하는 효율임금 수준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기업 간 임금 격차가 지속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③ X
틀린 표현은 '노동자의 이동이 단기적으로 활발하여 균형임금이 효율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를 가정한다'이다. 효율임금이론은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장청산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유지하므로 임금이 하락하여 노동시장이 신속히 청산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소득효과로 인하여 노동의 태만이 증가한다'이다. 효율임금은 실직할 때 포기해야 하는 임금을 크게 하므로 노동자의 태만을 줄이고 근로 노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⑤ X
틀린 표현은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만 남는 역선택 문제가 야기된다'이다. 높은 임금은 더 많은 우수 노동자의 지원을 유도하고 기존 우수 노동자의 이직을 줄여 노동력의 평균적 질을 높이며 역선택을 완화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효율임금을 단순히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임금으로 오해하면 ①과 ③을 고르기 쉽다. 핵심은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여 의도적으로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그 때문에 임금 격차와 비자발적 실업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서 높은 임금이 태만·이직·역선택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인다고 하면 효율임금의 효과에 부합한다. 반대로 효율임금이 시장을 청산하거나 태만·역선택을 늘린다고 하면 틀린 설명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효율임금은 균형임금보다 높고, 생산성은 높이지만 비자발적 실업도 만든다.

NoteBase